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7월 27일(통권68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교육정책의 대혼란과 학습혁명의 디자인

이 주 호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 커미셔너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목 차

1. 교육 대변혁의 시기
2. 교육정책의 대혼란
3. 학습혁명의 디자인
4. 교육계와 학계를 향한 제언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세계적으로 교육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 교육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250년 전 프로이센에서 시작된 대량생산 방식의 강의중심 교육모델을 폐기하고 차세대 모든 아이에게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하이테크 하이테크 학습을 중심으로 대량 맞춤형 학습의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교육 대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습혁명에 나서야 한다. 첫째, 최첨단 에듀테크(edu-tech)를 적극적으로 학습현장에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가 최첨단의 에듀테크와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각각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주도하던 그동안의 교육변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사, 학교, 대학, 창업가, 사회적 기업가, 민간재단, 미디어, NGO,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계와 학계에서 정부에게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학습혁명의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을 제안한다.

1. 교육 대변혁의 시기

인공지능(AI)이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고차원적인 일까지 척척 해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도 우리 젊은 세대는 곧 사라질 직업을 위한 교육을 여전히 받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약 65%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각국의 학교 모델은 18세기 프로이센에서 시작되어서 250년이 지나도록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세계은행에서 제기한 학습위기의 본질이다. 필자가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재정 위원회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학습혁명을 하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절반이 넘는 8억 2천5백만 명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 세계적으로 교육 대변혁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학습혁명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경제성장의 침체와 소득불균등의 확대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서민의 허리를 휘는 사교육 부담과 학생들의 더 높은 점수를 위한 암기와 정답 맞추기의 무한경쟁을 한국에 특수한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을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한다. 대량생산 방식의 프로이센 교육모델이 가지는 한계점이 한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현재 교육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을 찾기보다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민국의 학습혁명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우리는 해방 후 70년 넘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사람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의 힘으로

이루어내었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전진하기 위한 百年大計는 바로 대한민국을 학습혁명의 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 대변혁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학습혁명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모든 직업의 절반 가량이 자동화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학생들은 훨씬 폭 넓고 깊이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배워야하기 때문에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역량보다는 '어떻게 배우는지를 배우는(learn to learn)'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중요하다. 또한, 여러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줄 알아야 하므로 창조적 문제해결역량과 소통기반 협력역량이 크게 요구된다.

Joseph Aoun은 과거 교육에서 읽기, 쓰기, 계산의 문해력(literacy)이 기본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기계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세 가지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엄청나게 증가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문해력, 2) 코딩과 공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공학적 문해력, 3) 인문학, 소통역량,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인간적 문해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의 차세대가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모두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교수학습 방식이 가능해진다. 지금 첨단 교실에서는 교사가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모두 다른 최적의 학습 기회를 디자인해주는 '대량 맞춤형 학습'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학습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상의 교육으로 일찍이 제시되었지만, 소수의 부유한 계층의 자녀에게나 가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눈부신 '에듀 테크 (edu-tech)'의 발전과 교사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의 발전으로 이제는 모든 교실에서 대량으로 맞춤형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OECD는 '학습 환경을 디자인하는 교사'라는 보고서를 최근 출간하였다. 여기서는 교사들이 강의와 같은 대량생산 방식이 아니라 교실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학습을 디자인해주는 세계 사례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교사들은 거꾸로 학습과 같은 Blended Learning, 게임을 통하여 학생을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Gamification,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Experiential Learning, 다언어와 토론학습, 메이커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을 동원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디자인한다.

미국에서 학습혁명을 선도하는 애리조나주립대학(ASU)은 최근 수학과 생물학 등의 기초과목에 인공지능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에 맞추어 상호작용적으로 학습경로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도입하여 특히 기초과목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크게 향상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ASU의 사례에 교육심리학자 블룸(Bloom)의 이론을 적용하여 보면, 학생의 암기와 이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는 맞춤형 학습과 온라인 학습과 같이 하이테크(high-tech) 학습을 도입하는 한편, 학생의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역량을 위해서는 교수가 강의 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학생에게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는 하이터치(high-touch) 학습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셋째, 과거의 엘리트 전통 명문학교와는 전혀 다르게 대량 맞춤형학습을 실현하는 새로운 혁신적 학교와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백 년 전통의

아이비 대학들에게 ASU와 같은 혁신적 대학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ASU는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배제시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학생을 경제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성공시키느냐로 승부를 걸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에서도 기존의 학과와 전공의 벽에 갇혀서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변혁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과감한 학과 통폐합과 혁신적인 융합전공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초중고교에서도 학습혁명은 시작되었다. 뉴텍하이स्कूल이 1995년 모든 수업을 두 개 이상의 교과목을 융합하여 프로젝트 학습 형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후 이제는 170개가 넘는 학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사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학습방식을 지속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

2. 교육정책의 대혼란

세계적으로 교육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한 때 교육정책을 책임졌던 필자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 교육을 정치적 혹은 이념적 수단으로 삼거나, 교육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단기처방과 인기영합에 급급하다 보니, 교육정책이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심지어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역주행하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최근 교육정책은 평준화와 획일화의 과거로 역주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는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진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실마다 한 명의 교사가 획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대량생산 모델로부터 본격적으로 탈피하여 대량 맞춤형학습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화를 추진하였으나, 다양화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간의 수직적 차별화를 초래한다는 반발에 직면하면서 다시 평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평준화와 다양화의 취지를 모두 살리면서 대량 맞춤형학습 혹은 '개별화 교육 (personalized learning)'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자사고 혹은 특목고를 없애기 보다는,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교실에서 대량 맞춤형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준화와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로 교육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반대 개념이 아니다. 개별화 교육 혹은 대량 맞춤형학습을 통하여 수월성교육과 평등교육을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과 학교를 옥죄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와 규제가 다시 극에 달하고 있다. 과거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시와 간섭으로 교육을 발전시켜온 대량생산 체제와 정부주도 교육발전 모델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급감하는 학생으로 어려워지는 대학 재정 여건에서, 교육부는 대학평가에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을 통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 대학평가에 정성적 항목을 추가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지원을 좌지우지하고, 더 나아가 만약 현재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대학에도 정부가 경상비를 지원한다면, 사립대학이 마치 사립 중·고등학교처럼 더욱 더 강한 정부통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학교도 교육자치를 명분으로 교육청이 교육의 폐쇄적 울타리 안에서 권한이 더욱 더 비대해지면서, 정작 개별 학교 더 나아가 교사가 자율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학생에 맞추어 학습 기회를 디자인 해줄 수 있는 자율은 충분히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

세계적 추세는 개별 학교와 대학에 더 많은 자율을 주는 한편, 정부는 혁신과 포용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도 개별화 교육 혹은 대량 맞춤형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 관치를 혁파하고 학교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혁신하고 포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교육에서 인기영합주의의 망령이 깊게 드리우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적성과 소질에 딱 맞추어 행복하게 학습하고, 모든 대학의 졸업생들이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번창하려면, 교사와 교수가 노력하고 변화하며 혁신하고 개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교육계가 젊은 세대를 위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교사와 교수에게 더 이상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정치적으로 인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지지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가 학교와 대학에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변화와 혁신의 책무를 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차세대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공론화위원회에 대입개편의 공을 넘겼다. 객관식 수능의 확대,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확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검토하는 어떤 대입개편안에도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학교와 교사가 대량 맞춤형학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화를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더 나아가 국민 캠페인도 전개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교수학습방식을 완전히 바뀌지 않고 교사가 학생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대학개편안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힘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대입개편안만을 공론화위원회에 부쳐서 답이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이며 책임회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3. 학습혁명의 디자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습혁명에 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학습혁명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많이 늦은 것은 아니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학습을 결합하여 우리의 차세대 한 명 한 명에게 평생 동안 최적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대량 맞춤학습 체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학습혁명을 위해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에 주력하여야 한다.

첫째, 최첨단 에듀테크(edu-tech)를 적극적으로 학습현장에 도입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학습혁명이 일어나야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형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AR, VR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기술, 세계의 아이들이 접속하여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 등 최근 에듀테크의 발전은 눈부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특징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으로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 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이다. 교육에서 대량 맞춤학습

은 한 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가 250년 만에 드디어 끝나고 학생들 개인의 잠재력과 소질에 맞춘 전인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할 예정인 IT 인프라 강국인 만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에듀테크를 학습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교사가 최첨단의 에듀테크와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모든 학생에게 각각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학생의 암기와 이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서는 맞춤형 학습과 같이 '하이테크 학습'을 도입하는 한편, 적용, 분석, 평가, 창조와 같이 고차원적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생이 소규모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학생에게 질문과 토론을 통한 하이터치 학습을 하도록 하여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학습을 디자인 해주자는 것이다.

한국은 가장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되는 등 교사가 디자이너로 전문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나라에서 교원노조가 교육의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였던 것도 교사를 디자이너처럼 전문화시키는 과감한 변혁을 정부가 시도하지 못하였던 탓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은 변화를 막아 왔던 교육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회의 창을 열어줄 것이다.

셋째, 세계적으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교육과 연구의 상아탑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다. 선진 대학들은 기존의 과학 분야별 영역을 초월하는 학제적이고 변혁적인 연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 수의 격감은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압력에 의하여 구조조정 하도록 만드는 여건으로 활용하여야지, 정부가 지금처럼 개별 대학의 정원을 직접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대학을 연명시키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사립대학에 정상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활력을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 보다는 대량 맞춤형학습의 제공, 학제적이고 변혁적인 연구,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산학협력, 창업 지원, 지역사회에 공헌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매칭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 바우처, 중소기업연구지원제도 등 혁신정책들을 통하여 대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 학습혁명의 주요한 추세인 대학의 평생 맞춤형학습을 위한 정책을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대학들은 평생학습 시대에 발맞추어 기업과 학습자와 함께 교육과정부터 함께 디자인한다. 평생학습자들을 위하여 MOO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다수의 대도시에 캠퍼스를 두는 소위 Multi-University Network도 출현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은 경직적 정부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변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대학의 학생 정원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경직된 규제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넷째, 학습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주도하던 그 동안의 교육의 변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사, 학교, 대학, 창업가, 사회적 기업가, 민간재단, 미디어, NGO,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주도적으로 혁신하고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영국은 이미 교사에게 새로운 코스웨어나 에듀테크 디바이스를 구

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듀테크 시장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20조가 넘는 사교육을 학습혁명을 뒷받침하는 에듀테크 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우리의 학습혁명 생태계를 세계로 활짝 열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중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미국, 캐나다, 일본에 각각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등 교육에 대한 개방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에듀테크 기업들도 아직 소수지만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인재들을 유치하여 하이테크 하이터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습혁명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개도국 교육원조도 우리의 과거 교육발전 모델을 따라하도록 전수할 것이 아니라 학습혁명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는 통로로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학습혁명의 허브가 되어서 우리의 학교와 대학들이 세계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고, 우리의 교육기관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육계와 학계를 향한 제언

대한민국이 비록 교육으로 성공하였지만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학습혁명의 선두주자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습혁명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도 필자가 만난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는 두 가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 모두가 교육의 힘을 믿고 있다. 둘째, 가장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와 학계는 변화를 위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정부에게 학습 혁명을 디자인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계와 학계에도 적극적으로 학습혁명을 주도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가장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되는 우리 교육계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이제 교사들이 학습 혁명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최근 교직개혁위원회(EWI)를 발족하고 필자에게 의장직을 맡겼다. EWI는 교사의 전문직화와 교직의 개방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미래 학교에서는 교사가 의사처럼 학습과학(Learning Science)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물론 하이테크 및 하이터치 학습을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디자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병원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의사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교를 다양한 전문가에 개방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교직과 학교의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총과 전교조를 포함한 각국의 교원노조가 가입된 국제교원노조(Education International)의 수장인 수잔 햅굿(Susan Hapgood) 여사가 EWI의 부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 교육계의 오래된 논쟁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을 교육계가 나서서 제안하여야 한다. 2년 석사 과정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2년 동안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생에게는 임용시험 없이 졸업 후 2년의 수습교사 기간을 거쳐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모든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 평가를 책임지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아이들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대학의 자율과 책무의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의 통제와 규제에 대하여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 대학을 스스로 디자인하는데 나서야 한다.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되고 있는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을 교육부나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선진국 대학처럼 대학 자율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학 총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의 대학입시를 디자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보낼 때 대학입시의 자율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 중심 통제로부터 떼어내는 동시에 혁신전략부(가칭)와 같이 새로운 부서의 관할로 바꾸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자율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및 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혁신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과감한 정부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한 번 국력을 교육에 집중하여 학습혁명을 선도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것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세계 인재들을 유치하고 세계 교육기관들에게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새로운 학습방법을 전파함으로써 세계에 기여하는 학습혁명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